

‘北 당국, 시장과의 전쟁’ , 그 일지

- 북한 당국 시장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일자(年/月)	출처	방침내용
05/10	조선일보	국가배급제 복귀 선언
06/12	데일리NK	만 17세 이상의 성인男 장마당 장사 금지
07/10, 12	좋은 벗들	女, 장마당 장사 연령제한(39세이하→49세이하)
07/11, 12	美 브루킹스 연구소	장마당 장사품목, 판매가격(시장가격, 국가가격 ‘이중가격’철폐) 통제
07/12	통일연구원	‘공산품’, 국영상점에서만 판매 가능
08/11	좋은 벗들	상설시장 ‘10일장’으로 전환(내각지시문)
08/11	좋은 벗들	종합시장폐지, ‘농민시장’으로 전환
08/11	데일리 NK	국영수매상점, 개인 장사금지 국가기관지정자만 가능
08/12	열린북한통신	‘중국산 제품’, 판매 및 구입 중단 (평양시 시범)
08/12	열린북한통신	‘중국산 제품’, 신의주 통과 없이 평양으로 바로 직운송

북한 시장 통제 방침(2005/10~2008/12) ©열린북한통신

‘국가배급제’ 복귀 방침을 선언하며 시작된 北 당국의 시장과의 전쟁이 좀처럼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北 당국은 ‘고난의 행군’ 직후 배급제 실시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장마당 장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장마당을 통해 자본 논리가 활성화되고 주민 개인의 경제력이 커질 것이 우려되자 시장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첫 번째로 국가배급제로의 복귀 방침을 선언했다. 장마당 장사를 허용했던 이유가 배급제의 유명무실하였기 때문이다. 뒤이어 장마당 경제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2006년 12월, ‘배급 700g 이상의 대상자는 장마당에서의 장사를 금지한다.’라는 지시가 전달됐다. ‘배급 700g 이상의 대상자’는 노동력을 보유한 만 17세 이상의 성인 남자이다. 즉, 남성들의 장마당 장사를 금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장마당에서의 경제활동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여성들의 장마당 경제활동 역시 당의 제재를 받는다. 2007년 10월, 39세 이하의 여성들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기존 방침을 더 강화하여 49세 이하의 여성들의 장사 금지 조치가 하달됐다.

2007년 12월 북한을 방문했던 게오르기 톨로라야(美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씨가 북측 지도자급으로부터 ‘이중가격’을 철폐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장

마당에서 주민들 간의 거래를 통해 생성된 ‘시장가격’과 국가가 물품 값을 지정한 ‘국가가격’이 있다. ‘이중가격’을 철폐한다는 것은 시장가격을 철폐하고 국가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야한다는 것이다.

장마당에 대한 통제는 판매 품목에도 적용되었다. 데일리 NK의 보도에 의하면 2007년 11월 헤산에서는 의약품, 회령에서는 녹화기(VCR), 술, 외화, 약품 등의 판매가 제한되었다고 한다. 또한 평양에서는 상품의 양을 제한한다는 포고문이 붙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 해 12월에는 공산품을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장마당에서의 공산품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이어 2008년 11월 종합시장폐지 방침이 발표되었다. 시장체제를 이전의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량은 각 단위의 양정사업소 배급소에서 배급을 받고 공업품은 국영수매상점에서만 판매, 구입할 수 있으며 장마당은 농민시장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 몇몇 농산물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열리던 시장은 한 달에 3번으로 열리는 횟수도 제한되었다. 2008년 11월 이른바 ‘10일장’을 실시하라는 내각지시문이 하달된 것이다. 지정된 날짜인 1, 11, 21일에만 시장을 열라는 것이 그 내용이며 간부 강연회나 인민반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北 당국의 시장 통제 정책의 입김은 국영수매상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개인(도, 시, 군 행정위원회 상업국에서 허가받은 사람)이 국영수매상점을 인수하고 운영했다. 이러한 방식에서 투자도 운영도 모두 국가가 하도록 바꾼 것이다. 상점의 운영은 국가가 지정한 인물만이 경영을 할 수 있다. 또한 판매할 수 있는 물자의 보급을 국가가 하며 판매를 통해 나온 이익 모두 국가가 가져간다.

최근 시장 통제 정책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방침이 주 내용이다. 당국은 2008년 12월에는 평양시를 시범으로 중국산 제품의 판매 및 구입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는 데 있어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신의주를 통과하지 않고 평양으로 바로 운송, 배급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앞으로 중국산 제품은 국영상점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제품의 신의주로의 운송이 금지되었다. 신의주는 전국 상거래의 중심지로 중국산 제품이 전국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평양으로 직송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정책들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목적이 시장 통제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두 다 실패하여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각종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대다수는 방침을 지키지 않거나 시장 감시를 나온 시장 관리원들에 뇌물을 주기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방침에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방침을 집행해야 하는 간부들조차도 방침의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과의 전쟁에서 北 당국은 백전백패하고 있는 것이다.